



주간통일정세 2010-25(2010.06.14~06.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일, 최고인민회의 1주일만에 공개활동(6/1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참석 후 1주일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해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의 군인가족 공연을 관람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963군부대(호위사령부 별칭), 제10215군부대(보위부 별칭), 제7501군부대(보안부 소속) 등 8개 군부대의 군인가족들이 참가한 '제2기 3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이번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에서는 4중창 '영원한 미소', 독창 '나는 군관의 안해(아내)라오' 등 여러 곡이 무대에 올려졌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군인가족들의 예술공연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 뒤 군중 문화예술활동을 더 힘있게 추진할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방송은 소개
 - 방송은 이 행사에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우동측 보위부 수석부부장, 현철해·리명수 국방위 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 당 비서, 김경희 당 부장, 주규창 당 제1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함.
- **北김정일, 새로 만든 축구장 현지지도(6/19, 조선중앙통신)**
 - 2010 남아공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새로 만들어진 축구경기장을 현지지도했다고 통신은 밝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기장의 시설을 둘러본 뒤 "축구경기장을 적극 이용해 군인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고 당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어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새로 만들어진 5m² 규모의 '장백'호 굴착기와 새단장한 건설기계설계연구소 등을 돌아보고 만족스러워 하면서 "질 좋은 기계들은 더 많이 생산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줘야 한다"고 밝힘.
 - 노동당의 김평해 평안북도 책임비서와 김경희·태종수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일동향

- 6/15 김정일, 군부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6/15, 중통)
 -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대장), 우동측(국방위원, 대장), 현철해·이명수·윤정린(대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당 부장), 최태복·김기남(당 비서), 김경희(당 부장), 주규창(당 제1부부장) 등과 함께 관람
- 6/19 김정일, 새로만든 축구장 및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6/19, 중통)
 - 김평해(노동당 평안북도 책임비서), 김경희·태종수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6/14 인민문화궁전에서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보고), 南 한상렬 목사 등 참가하 진행(6/14, 중방)
 - 김영남, 노두철(내각 부총리), 김영대(「사민당」 상임위 위원장), 류미영(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김완수(「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장), 안경호(「조평통」 서기국장/사회), 조일민(「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등 참가
- 김정일의 黨사업 개시(1964.6.19) 46돌 즈음 「여맹」원들의 경축모임, 6.17 노성실(여맹위원장/경축보고), 리영수(黨 중앙위 부장) 등 참가하 개선문광장에서 진행(6/17, 중방)

나. 경제

● 北 ‘올인’ 희천발전소, 발전용량 30만 kw(6/14, 연합뉴스)

-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인사들의 말을 인용,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북한 자강도 청천강 상류지역에 건설 중인 희천 수력발전소가 최근 댐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완공되면 발전용량이 30만kW에 이를 것이라고 전함.
- 주북한 중국대사관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류홍차이(疏洪才) 주북한대사가 지난 10일 희천발전소를 시찰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 발전소 발전 용량이 30만kW라고 확인함.
- 이어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비 오듯 땀을 흘리며 공사에 매진하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2012년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북한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
-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 수력발전소의 낡은 터빈을 교체하고 예성강, 금진강, 어랑천, 태천, 단천, 희천발전소를 착공하는 등 수력발전소 건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특히 희천발전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언급될 정도로 북한이 추진하는 핵심 국책 사업 가운데 하나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1주년을 맞은 지난 3월 22일 보도를 통해 희천발전소 건설과 관련 “평양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완공될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에 직통으로 전기를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음.

● 北, 1천 24개 인터넷주소 등록(6/15,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몇달 새 1천24개의 인터넷주소(IP address)를 등록했다고 IT전문미디어 IDG가 전함.
- IDG에 따르면 평양의 ‘스타 조인트 벤처’사가 관리하는 이들 인터넷주소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군사적 필요나 정부 차원의 용도에 따라 쓰일 것으로 추정
- IDG는 북한의 이번 인터넷주소 등록에 대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정보 블랙홀’로 불리던 북한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세상으로 한 걸음을 떼 셨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
- 현재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차이나넷컴’의 통신망을 끌어와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가능한 인원이 수천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북한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내각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각각 일본과 중국의 서버를 쓰고 있음.
- ‘스타 조인트 벤처’는, 2002년 북한에 처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했던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IDG는 설명

● 北, 유해 폐기물 수입 합영기업 설립(6/15, 연합뉴스)

- 북한 조선령봉련합회사와 대만 타이중현(臺中縣) 소재 D 기업이 서명한 계약서 등에 따르면 양사는 합작으로 라선시에 ‘R 합영기업’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까지 15년간 D사로부터 금속폐기물 300만t, 산업폐기물 200만t, 폐유 60만t 등 유해 폐기물 560만t을 수입해 처리기로 한 것으로 밝혀짐.
- 이런 사실들은 조선령봉련합과 D사 간 계약서 이외에 ▲라선시인민위원회 발급 R사 기업등록증 ▲타이중현 정부 발급 D사 폐기물처리 허가증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발급 R사 폐기물수입 허가서 등을 통해 드러남.
- 타이중현 정부가 작년 4월13일 D사에 발급한 폐기물처리 허가증에는 수은, 비소, 카드뮴, 납, 육가크로뮴 등이 들어 있는 유해 폐기물을 R사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또 1월16일자로 된 라선시인민위 발급 R사의 기업등록증에는 R사의 소재지는 라선시 송평동(松平洞), 법정 대표는 대만 국적의 L씨, 기업 형식은 합영, 업종은 공업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돼있음. 같은해 3월 발급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폐기물수입 허가서에는 R사가 15년 간 560만t의 폐기



물을 수입해 연료, 건설재료로 재활용한다고 돼있음.

다. 사회·문화

● 北, 식량배급 포기, 주민 자급자족 지시(6/14, 좋은벗들)

- 북한 노동당이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하순 국가의 식량배급 중단을 인정하고, 24시간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식량 자급자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률클스님은 14일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5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재 조선의 식량 사정에 관하여’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냈다”고 주장
- 법률클스님에 따르면 이 지시는 화폐개혁 이후 식량 사정이 계속 나빠져 당분간 국가 차원의 식량 공급이 어려우므로, 식량을 배급받아온 주민들은 각자 알아서 식량을 구하고 당, 내각, 국가보위부 등 관련 기관들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률클스님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기대했던 식량 지원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노동당이 할수 없이 ‘5.26 당 지시’를 내린 것 같다”면서 “이번 식량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어 1990년대 같은 대규모 아사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함.

● 北통신, 브라질전 결과 신속보도(6/1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16일(한국시각) 새벽 벌어진 G조 조별리그 1차전 북한과 브라질과의 경기 결과를 종료 6시간 후에 신속히 보도
- 통신은 “국제축구련맹 2010년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조선팀과 브라질팀 사이의 경기가 평양시간으로 16일 새벽에 있었다”면서 “경기 시간 88분경 정대세 선수가 머리받기(헤딩)로 연락(패스)한 공을 지윤남 선수가 문전으로 돌입하면서 강하게 차넣어 득점했다”고 후반 44분에 터진 득점 장면을 상세히 전함.
- 통신은 또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경기 후반전에 조선 선수들은 먼저 두 점을 실점한 상태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좋은 차넣기(슈팅) 기회들을 마련했다”며 북한팀의 경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北통신 ‘향토음식 전문식당, 평양서 인기’(6/1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 시내의 각 도 향토음식 식당들이 손님들로 흥성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방의 유명한 식당 이름을 그대로 붙인 ‘압록각’(량강도), ‘신흥관’(함경남도) 등 9곳을 소개
- 통신은 “최근 개건(리모델링)한 ‘경암각’(황해북도)에서는 보기만 해도 구미를 돋구는 약밥, 경단, 추어탕, 녹두지짐 등을 봉사(판매)하고 있다”면서 “실처럼 가늘면서 질기고 매끈매끈한 국수발에 명태회를



꾸미로 얹은 ‘신흥관’의 감자농마회국수는 눈맛 좋고 먹음직해 인기”라고 말함.

- 통신은 또 “찰수수지짐, 산나물볶음밥 등을 봉사하는 ‘강계면옥’(자강도)을 비롯해 ‘압록강각’(평안북도), ‘장수각’(평안남도)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그칠 새 없다”고 덧붙임.

● 北 ‘우리축구 다시보게 하는 득점’(6/16, 조선중앙TV)

- 새벽 벌어진 G조 조별리그 1차전 북한과 브라질 경기를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녹화중계하면서 2-0으로 끌려가던 후반 44분 지윤남(34, 4.25체육단)의 통쾌한 만회골을 “우리 축구를 다시 쳐다보게 하는 득점장면이다.”라고 소개
- 이날 해설자로 나온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비록 2대1로 패했지만 세계 최강 브라질을 놀라게 한 지윤남의 득점과 관련, “세계적인 문지기도 어쩔 수 없는 위력한 차넣기였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는 브라질의 방어선을 뚫고 득점한 것은 우리 축구를 다시 쳐다 보게 하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득점장면이다”고 평가
- 리 교수는 전반전에 득점 없이 0-0이 지속되자 “브라질이 현재 국제 순위 1위이고 우리가 105등인데 이렇게 보면 상대가 되지않고 많은 득점 차이로 경기가 운영되리라 보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현재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팀의 선전에 기대감을 나타냄.
- 브라질의 첫 골에 대해 북한 아나운서는 “리명국 선수가 각도를 좁 줄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간 감이 있다”고 말했으며, 리 교수는 “거의 각도가 없는데 뒷선에서 달려 들어가면서 깎아 찼다. 우리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 아까운 실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냄.
- 리 교수는 특히 브라질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의 태클로 넘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요란한 동작”, “엄살동작”이라거나 “넘어질 정도로 차진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주심이 경고를 줘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함.
- 또 후반 40분경 정대세 선수가 브라질 골대로 돌격해 들어가다 브라질 선수가 공을 차내면서 넘어지자 “11m 차넣기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임.

● 北박두익 ‘새로운 축구신화 창조하길’(6/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결승골로 이탈리아를 꺾어 파란을 일으켰던 북한의 축구영웅 박두익(74)이 남아공 월드컵의 북한-브라질전을 지켜본 후 “우리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선군조선의 새로운 ‘축구신화’를 창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함.
- 박두익은 “강팀과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조선 선수들이 미



답다”면서 “정대세 선수와 지윤남 선수의 재치있는 2인 결합에 의해 이뤄진 통쾌한 득점은 축구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것”이라고 칭찬함.

- 김영규(45) 체육과학원 연구사는 조선중앙통신에 “월드컵을 다섯번이나 쟁취한 브라질팀과의 경기에서 조선 선수들이 발휘한 정신력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룰 중요한 담보”라고 평했으며, 조선체육대학 학생인 한성철(23)도 “경기장을 중흥무진하는 조선 선수들을 보고 격동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는 소감을 내놨음.

● 北통신 ‘평양서 신석기 토기 발굴’(6/17,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에서 신석기 시대의 ‘출산 무늬그릇’이 발굴됐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그릇은 주둥이 직경이 28cm, 몸통 직경이 18.8cm 이고 높이가 30cm 정도인 질그릇으로 주둥이쪽에는 점무늬와 톱날 무늬가, 몸통에는 출산무늬가 장식돼 있음.
- 통신은 “몸체부분에는 두 개의 평행사선이 서로 교차돼 두줄로 새겨져 있고 매 평행사선 안에 짧은 사선을 촘촘히 채운 것”이라고 출산 무늬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유적에서만 이 무늬 유물이 나왔다고 덧붙임.

● 北식량난 심각…집단 아사 농촌까지 확산(6/17, 좋은벗들)

- 좋은 벗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26일 국가의 식량배급 중단을 선언하고, 24시간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식량 자급자족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소식지에 따르면 실제로 황해남도 도당이 조사한 결과, 연안군의 오현리와 풍천리, 청단군 등의 농촌 마을에서는 약 60%의 농가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배천군의 한 협동농장에서는 15명이 근무하는 한 분조에서 10명이 먹을 것이 없어 결근했다고 함.
- 소식지는 “작년에도 나쁜 기후 조건으로 이들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다 한 해 수확의 3~4개월치를 균량미로 걷어가는 등 이것 저것 제하는 것이 많다 보니 농민들 먹을 식량이 먼저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
- 이어 “굶주림에 시달리다 보니 일하러 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산나물과 풀을 캐러 산으로 가는 농민들이 많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 옥수수 파종이나 모내기를 못한 농장이 많아 올해 농사에서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 北주민들, TV중계 보러 일찍 퇴근(6/17, 조선신보)

- 신보는 북한에서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 조선중앙TV가 경기를 녹화 중계하는 오후 9시계면 “전차나 버스가 텅 빌 정도”라고 전함.



- 이어 신보는 월드컵대회 개막 이후 “평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겨, 많은 시민들이 일찍 집으로 퇴근해 가족들과 경기 방송을 보고 있다”고 소개
- 평양 송신평복공장 간부인 조충성(36)씨는 “늦은 저녁까지 진행됐던 생산작업을 최근에는 저녁 8시 전에 끝내고 있다”며 “이는 매일 계획수행을 다그쳐 끝내고, 월드컵 방송 시간 전에 퇴근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함.

● 북한서 중고노트북 인기…밀수 늘어(6/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노트북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노트북이 인기라고 전함.
- 방송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최모씨는 “요즘 노트북 밀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구해달라는 주문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 못할 정도”라고 말함.
- 함경남도 혜산 장마당에서 중고 가전제품을 파는 한 여성도 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고 노트북 가격이 20만원 안팎인데 이는 중고 텔레비전보다도 싼 것이어서 사람들이 중고 노트북을 더 선호한다”고 전함.
- 방송은 충전 배터리가 내장된 노트북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북한에서 TV나 DVD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당국의 불시 검열시에도 쉽게 감출 수 있다고 전함. 그러나 밀수한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노동단련대에 수용되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고위층을 중심으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진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우표들(개별우표 1종) 및 각 종류의 공통들을 반영한 새 우표(묶음전지 1종) 발행(6/14, 중통)
- 北 각지 농촌들, 기본면적의 벼모내기 완료 보도(6/17, 중통)

2. 대외정세

● 엑스포 북한관 ‘北 축구선수 대우 좋다’(6/18, 연합뉴스)

- 중국 상해청년보(上海青年報)는 엑스포 북한관의 책임자인 김은규(31)씨가 자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축구선수들의 월급이 12위안(2천100원)에 불과하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는 말도 안 된다.”며 선수들은 평소에도 국가로부터 특별 수당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씨는 “북한 선수들은 성적이 좋을 경우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포함해 특별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면서 “과거 199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정성옥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훈장과 아파트, 벤츠 승용차 등을 하사했다”고 말함.
- 북한 대표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일부러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김형준 부상), 6/12 카이로에서 이집트 외무성 대표단과 회담(6/14, 중통)
- 北 노동당 대표단과 튀니지 인민통일당 대표단 회담, 6.15 김영일 부장 등 참가下 진행(6/15, 중통·조선신보)
- 北 피바다가극단, 가극 ‘홍루몽’ 중국 중경시 중경대극원에서 공연 (6.13~14) 진행(6/17, 중통)

3. 대남정세

● 6.15실천위 ‘평화수호, 통일의 길은 6.15 이행뿐’(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6.15공동선언 1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 “민족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로 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다”면서 “6.15선언에 역행해 군사적 긴장과 동족 사이의 대결을 추구하는 책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이 공동성명은 또 “송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통일 의지와 신념으로 자주통일과 민족 대단합을 위한 통일애국 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말함.
- 원래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는 남측위, 북측위, 해외위 3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날 북측이 발표한 성명은 남측위와 팩스로 사전 조율됐으나, 일부 문구는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남측위 관계자는 “A4용지 2장 분량의 성명 내용 중 ‘외세’, ‘반통일 세력’에 관한 두 군데 세부 표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남과 북이 직접 만나 세부 문안을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미합의 표현이 일부 들어간 듯한데, 6.15선언의 의의를 강조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전체 맥락은 같다”고 말함.



● 北TV, 南-그리스전 중계...‘호평’(6/1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4일 저녁, 이틀 전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B조 조별리그 1차전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녹화중계함.
- 해설로 나선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전반 초반에 터진 이정수의 골에 대해 “(그리스) 방어수들이 키가 186, 185cm로 다 높은 키들인데 정확히 맞추지를 못하고 14번 방어수 리정수 선수가 잘 들어가면서 받았다”고 높이 평가
-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도 “방어수가 공격선까지 나와서 별차기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비교적 잘했다”고 지적
- 리 교수는 “현재 국제축구연맹 국제순위를 보면 그리스팀은 13등권 내에 있고, 32개 팀에 있어서도 10번째에 있다”며 “남조선팀을 보면 국제축구연맹 순위에서는 47위 그리고 32개팀에서는 29번째로 지금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경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전망하기도 함.
- 중앙TV는 한국의 그리스전 전반 45분간 경기를 약 30분 정도로 줄여서 중계함.

● 北정당·단체 ‘남북관계 타개책, 6.15실천뿐’(6/1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의 정당과 단체들이 6.15공동선언 10주년 연합성명을 내고 “현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 관계의 유일한 타개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연합성명은 6.15공동선언을 ‘지난 시기 모든 북·남 합의를 총집대성한 통일의 최고 기치’로 평가하고 “북남 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속과 정견, 과거를 불문하고 손잡고 나갈 것이지만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모독하며 짓밟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성명은 또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이며 6.15위업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면서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지 말고 우리 민족 문제와 북남 관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북한의 김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도 1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 보고서에서 “반통일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조성된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북남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비슷한 주장을 폈음.

● 北 차석대사 ‘우리가 했다고...어방도 없다’(6/15, 연합뉴스)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14일(현지시간) “비과학적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나. 어방도 없다”고 말함.



- 박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빅티(victim, 피해자)”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해 본 뒤에 안보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
- 그는 또 한국의 인터넷에서 떠도는 각종 천안함 관련 루머들을 열거 하기도 했고,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축
-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박 대사는 “그렇게 큰 배가 두 동강이 났는데 추진체가 하나도 깨져 나간 데 없이 그대로 있을 수 있다. 또 글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1번 아닌가. 짠 물속에서 얼마나 있었나. 내 기억에는 5월 14일 발견해 꺼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 50일 동안 짠 바닷물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글씨가 그대로 있다. 과학자들은 그 정도 폭발이면 최소한 300도에서 1천도가 넘어간다는데 글자는 130도 내지 200도 전에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한다.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나. 어방도 없다. 전혀 한 것이 없는데 우리 보고 했다고 하니 우리가 빅티 아닌가. 좋다. 그러니 너희들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 결과 나온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초청하면서 우린 왜 초청 안 하나. 그 이유가 뭐냐. 과학적으로 했다면 겁날게 뭐 있나.”
- 다음날 열릴 북한의 기자회견에서 합조단 결과에 대한 반박논리나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를 내세울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조사단 보내서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 (우리가)조사 하기 전에 안보리에서 남조선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안보리가 선불리 나서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브리핑장에서) 했다.”고 함.
- 한국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안보리 이사국들에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던데, 북한 측도 받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난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성원들(안보리 이사국들)한테 다 갔나. 그거야 뭐 의혹이 있다는 거야...그런데 뭐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으니까.”라고 답변함.
-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볼때 어떤 생각이 드나에 대해서는 “내가 분석하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은가. 어쨌든 간에 의심이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비과학적으로 사실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보자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의심 보도들이 나오고 있나. 좌초라든가, 옛날 70년대에 묻어 놓은 기뢰라든가, ‘프렌들리 화이어’라고도 하고, 왜 미국하고 남조선 사이에 잘못 해 가지고 쏜 것 아닌가 하는 것 말이다.”라고 함.



● 평양시민, 南 승리에 환호(6/15, 조선신보)

- 신보는 남한의 축구대표팀이 2010남아공월드컵 첫 경기에서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북한 주민들도 환호했다고 전함.
- 신보는 전날 조선중앙TV가 오후 9시부터 1시간 가량 ‘한국 대 그리스 전’을 녹화중계한 소식을 전하면서 “동족이 출전한 경기는 다른 경기보다 큰 관심을 끌었고 (평양) 시민들은 예외없이 남조선팀을 응원했다”고 밝힘.
- 한 평양시민은 인터뷰에서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이 이기면 기분이 좋지, 패하는 것을 누가 좋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신문은 소개
- 중앙TV는 12일 밤 남아공과 멕시코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매일 주요 경기를 녹화중계하고 있고, 평양시를 가시청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방영되는 ‘만수대TV’는 13일 ‘월드컵 참가팀 분석’, ‘2010년 월드컵을 노리는 축구강팀’이라는 제목의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천안함 조사결과 날조…소설같은 얘기’(6/16, 연합뉴스)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천안함과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 조사 결과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한국의 정치적 스케줄과 미국의 이 지역 이해가 맞물린 예정된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우리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하니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조사하면 분명한 원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합동조사단에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나흘 전에야 참여하거나 기술적 자문만을 했을 뿐”이라며 “조사 결과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문이 너무 많다”고 밝힘.
- 신 대사는 “한국 위성이 실패한 원인도 우리의 어뢰 공격 때문인가”라면서 “이는 정말 웃기는 조사결과이고 소설 같은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유엔이 대북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우리는 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면서 “이후 대응 조치는 우리의 군대가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신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시점에서 방북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우리 조사단이 현장을 가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라고 일축했음.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위험천만한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당장 중지하라’(6.14, 평방)
 -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는 대결미치광이’(6.14, 중방)
 - ‘불순한 모략극의 진상을 가리우려는 비열한 탄압책동(6.16, 중방)
 - 대통령의 ‘국정연설’(6.14)을 시비하며 천안함 피격사태는 “韓-美의 날조극, 모략극”이라고 持續 강변과 반정부 선동(6.17, 중통·평방·노동신문)
 - 韓·美·日 국방장관 회담(6.5, 싱가포르)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구실로 3각 군사동맹 부활, 외세공조’라고 주장하며 “우리(北)는 침략자들에게 천백 배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再次 위협(6.17, 중통·민주조선)
 - 천안함 피격사태 관련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주장(6.17, 중통·노동신문)

[6.15/10.4선언 이행 관련 우리 정부 및 미국 비난]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패당의 반통일 책동으로 인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6.15, 중방)
-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반대하면서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이○○정권의 흥계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 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데서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음”(6.15, 평방)
- 6.15공동선언은 “김정일의 협상술이 가져온 특기할 사변 등”으로 美化粉飾 하며 “6.15·10.4선언 고수 이행,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민족자주통일” 선동(6.15, 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정부, PSI 정식 운영멤버 참여 추진(6/20)

- 정부는 천안함 사건 후속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PSI(확산 방지구상)의 핵심 기구인 OEG(운영전문가그룹)에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OEG는 PSI를 이끄는 일종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현재 95개국에 참여하는 PSI 운영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음.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올 하반기 역내 PSI 해상 차단훈련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PSI 운영의 핵심 주체인 OEG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음.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초 일본에서 열리는 OEG 회의에서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EG는 PSI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20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아태지역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참여함.
- OEG에 가입할 경우 PSI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불법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존 95개 가입국이 확보한 풍부한 사전정보를 공유하는 효과도 기대됨. 한국은 지난해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지역 운영전문가그룹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바 있으나 정식 멤버로 가입하지는 못했음. 정부는 또 오는 10월 하순 부산에서 아·태지역 PSI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올 하반기는 우리나라의 PSI 훈련 참여와 활동이 크게 강화되는 시기”라며 “특히 PSI 워크숍은 각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美, 천안함 관련 대북 금융제재 검토(6/19)

-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독자적으로 대북(對北)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다양한 선택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방안



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도 미국이 북한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들은 제재 대상에 북한의 해외 불법자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지난 2005년 북한 계좌가 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방식이 대북 압박에 유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식통들은 나아가 미 재무부가 이미 제재 대상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지켜본 뒤 금융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음. 미 정부의 한 관리는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금융제재를 취하는 데 조심스러웠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이 그 같은 태도를 바꿔놨다며 “우리는 도발적인 행위에 보상할 수 없고, 처벌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북한에 다시 보여줄 시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 미국이 실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 북한의 최대북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18일 평양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서 천안함 사건이 한국과 미국의 ‘조작’이라면서 대북 제재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 “유엔 천안함 대응, 기대보다 약할 것”(6/18)

- 미국 워싱턴의 유력 정보지 ‘넬슨 리포트’의 크리스토퍼 넬슨 발행인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이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강력한 수준에 이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했다.
- RFA에 따르면 넬슨 발행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식당에서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산하 ‘한국협회’(The Korea Club) 주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유엔에서 애초 한국과 미국이 바랐던 것만큼의 강력한 성명이나 제재를 담은 결의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하지만 기대한 만큼 강력한 대북 규탄 내용을 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천안함 사건이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어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도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 등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장국인 멕시코에 제출했으며,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문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리 ‘천안함 논의’ 담보>(6/1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함. 지난 1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과 북한 대표부의 의견을 청취했던 안보리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 유엔의 한 외교관은 17일 “안보리가 천안함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요국간에 물밑 접촉을 가끔 하는 정도”라고 말했음. 박인국 유엔대사는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시동을 거는 단계”라고 말했음.
- 그러나 안보리 논의는 금주를 넘길 경우, 상당기간 장기화될 공산이 큼.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19일부터 열흘간 아프가니스탄 현장 시찰을 떠날 예정이어서, 금주 중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이후로 논의 자체가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유엔 관계자는 “현장 시찰에 모든 주요국 대사들이 참여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또 현장시찰을 떠난다고 해서 안보리 업무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의장과 상당수 이사국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척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운게 사실임.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불분명한 입장도 여전함.
- 이들 두 국가는 14일 합조단 조사 결과 브리핑이나 북한측의 의견개진 당시에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거의 질문도 하지 않았음. 일각에서는 안보리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여러 객관적 정황과 과학적 조사 결과로 인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쪽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선불리 북한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국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최대한 장기화 시켜 ‘김을 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임. 한국 정부 역시 ‘가능한 한 조속한 처리’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나 형식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박 대사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처리 결과에)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특히 합조단의 설명회를 기점으로 우리의 과학적 조사 결과가 북한의 ‘피해자’ 강변을 압도했다고 판단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논의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 만큼 안보리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캠벨 “北에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6/17)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조치와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매우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음. 캠벨 차관보는 이날 낮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오찬



회동을 가진 직후 도어스텝(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같은 입장 하에 한·미 양국은 적절히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지금은 한미동맹에 있어 결정적 순간”이라며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미 양국이 한국전쟁 발발 60년인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음.
- 캠벨 차관보는 “안보리 대응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적절한 양자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우리 측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데 대해 “북한이 명백한 침략자”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이뤄진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읽었다면 누구나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캠벨 차관보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가 앞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음. 이용준 차관보는 앞서 “미측은 천안함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안보리에서의 전략과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적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 성김 국무부 6자회담 특사,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함께 전날 방한한 캠벨 차관보는 이날 유명한 장관, 천영우 제2차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차례로 만났음. 캠벨 차관보는 회견을 마친 뒤 바로 호텔을 출발,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떠났음.

● <안보리 의장성명 가닥..문안조율 최대관전>(6/16)

-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한 남·북간 ‘브리핑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정부의 다음 대응수순이 주목됨.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자평하는 브리핑 결과를 디딤돌 삼아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규탄 의지를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로 구현해내는게 최우선적 과제임.
- 특히 안보리 논의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어가려는 북한의 파상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여하히 이사국들의 ‘컨센서스’를 모아낼 수 있느냐가 천안함 외교전의 성패를 가를 관건임. 그간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이나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안보리 대응의 ‘형식’은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 여기에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제정치의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음.



- 1,2차 핵실험때와 같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번 사안은 결의안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임.
- 핵실험은 세계 각국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으로 인식하지만 천안함 사건의 경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라는 ‘국지적’ 사안이어서 자신들의 이해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탓임. 국지적 분쟁사안을 놓고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는 드뭄. 안보리 대응의 주안점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실효성’ 보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북 규탄에 나선다는 ‘상징성’에 놓여진 점도 고려되고 있음.
-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또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결의안보다 이사국들의 컨센서스에 기반한 의장성명이 대북 응징효과가 더 크다는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임.
- 문제는 ‘내용’임.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문안을 만들어내는게 관건임. 이 같은 문안조율 작업의 진척도에 따라 전체 안보리 프로세스의 속도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는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기에 앞서 초안에 들어갈 핵심요소(key elements)들을 중심으로 이사국들과 수면밑 조율 작업을 진행 중임. 핵심요소들의 대체로 ▲북한을 지목해 잘못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역시 걸림돌은 중국과 러시아임. 중국은 북한의 책임을 명기하는데 반대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자는 선에서 ‘물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음. 러시아도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정부의 외교력은 미·일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내는데 모아질 것으로 예상됨.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은 한·미간의 공조방안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됨.
- 뉴욕을 방문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날 비이사국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임. 이 같은 ‘지난한’ 설득과정을 고려할 때 안보리 논의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 ‘속전속결’식으로 안보리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으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임. 정부 당국자들도 전략상 ‘호흡’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구상을 내보이고 있음. 고위 외교소식통은 “빨리 대응조치가 나오는데 중요한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반영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봐야 협상력만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파상적인 ‘선전전’ 공세에 대해 맞불작전



을 시도하고 있음. 북한측이 이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를 통해 북한 조사팀의 조사를 허용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정전협정 채널’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맥락임. 유엔사의 군사정전위 차원의 조사에 북한측이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북한측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 러 대사 “천안함 자체조사 2~3주내 결론”(6/16)

-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16일 “러시아가 진행 중인 천안함 사건의 자체 조사는 2~3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브누코프 대사는 이날 서울 방배동 한국외교협회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을 다녀간 러시아 전문가들이 본국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시설을 활용해 철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 전문가팀은 해군 소속으로 실력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훈련을 잘 받은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방한 시 여러 파편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추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러시아는 한국 측의 협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은 물론 다른 관련국들과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각국의 수도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강하게 반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침략을 받았을 때 원조 의무가 있는 동맹이 아니며 북한과는 매우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6자회담 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하며 이전과는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6자회담 전략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외교협회가 주관한 이날 초청 강연에는 홍순영 회장(전 외교장관)을 비롯한 전직 외교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안보리, 남북한 모두에 ‘자제’ 요구”(6/1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남·북한의 설명을 들은 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한 모두가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가 14일 밝혔다. 헬러 대사는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줄 것을 양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안보리는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 측의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이사국들에게 설명했으며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했음.
- 안보리 브리핑은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합조단의 설명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소개한 뒤 곧바로 사건의 개요와 어뢰 추진체 인양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틀면서 23분간 진행된 뒤 1시간 30분 가량 질의응답이 이어졌음. 남한측 설명이 끝난 뒤 북한 측도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북한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한측 윤덕용 합조단장은 “합조단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안보리 이사국들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북핵문제 해결위해 北정권교체 유도해야”(6/20)

-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주장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고 올해 5월 미 국방부의 우주정책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그레고리 숄티는 19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7·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외적인 위신과 영향력, 안보 등이 국제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가벼운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및 이란 지도자들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 숄티 부차관보는 따라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상에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미국이 계속 협상에 몰두할 경우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내적으로 정통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숄티 부차관보는 따라서 핵 협상보다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향후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숄티 부차관보는 또 북한과 이란의 핵 보유 야심을 좌절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핵 보유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솔티의 이번 기고문은 국방부 부차관보에 임명되기 전에 작성됐음.

● “美, 올해 ‘대테러 비협력국’에 북한 재지정”(6/18)

-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올해 대테러 비협력국가로 북한을 포함한 8개국을 재지정하고 이를 지난 8일 미 의회에 통보했음. 대테러 비협력국에는 북한 외에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국무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대테러 비협력국’을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은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전해졌음. 외교소식통은 “북한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판단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라며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美 “北,역내위협 해소해야 관계개선”(6/18)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역내에 던져주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핵심적인 위협을 해소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로널드레이건 빌딩에서 ‘아시아 폴리시 어셈블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 문제는 아버지 조지 부시 미 행정부 시절부터 도전적인 과제였으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오로지 유인책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실패해 왔다”면서 “그래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외교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 그는 현재 북한 문제와 관련해 험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나 묘수는 없다”고 말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해 천안함 사태 당시에 보여줬듯이 미국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략을 짜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음.
- 또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두번째 원칙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핵심국가들과 북한 문제를 다뤄나가는데 있어 강력한 의미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건조사 결과와 관련, “한국 정부가



매우 신중하고도 검증된 접근방식을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신중한 조사는 (천안함 사건) 보고서의 결론에 엄청난 신뢰를 부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對北 경제제재 1년 더 연장(6/16)

- 미국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시행한 대북 자산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를 1년 연장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 안보와 대외정책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26일 종료되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 핵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이 미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음.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이 법에 따라 북한과의 자산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6월 이 조치를 1년 연장했음.

● 美 “北 유엔반발은 상투적 도발행위”(6/16)

- 미국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유엔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를 날조라고 주장하고, 군사적 대응방침까지 밝히고 나선 데 대해 “불행하게도 이런 발언들은 북한을 특징짓는 상투적 도발행동처럼 들린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행동에 변화를 주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천안함 조사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번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일을 진전시켜 나갈 수는 없다”며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며, 만일 북한이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월드컵 무단중계 논란과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월드컵 중계가 북한 주민들을 외부세계로 노출시켜 개방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과는 별개로 저작권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법적인 거래도 할 수 있지만, 월드컵 방송을 절도 내지 해적질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범죄 국가(criminal state)’”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 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재지정(6/14)

- 미국 국무부는 14일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음.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버마), 쿠바 등 12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음.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주민들의 탈북을 촉발시키고 탈북자들은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결혼 혹은 매춘행위를 강요당하는 경우라면서 “인신매매 조직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중국에서 결혼이나 매춘을 할 북한 여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북한으로 송환 조치돼 엄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될 수도 있다”면서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강제노역에는 북한 정부당국이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외딴 곳에 설치된 수용소에는 15만~20만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특히 보고서는 “중국 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가운데는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수용소에서 강제노역, 고문은 물론 심지어 교도관에 의한 성추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 또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강제 낙태와 영아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용소 당국은 수감된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은 주민들을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열악한 경제, 사회, 정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내의 인신매매가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권고했음.
- 이에 반해 한국은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로 재지정됐음. 한국은 지난 2001년에는 3등급에 그쳤으나, 2002년 이후 9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北, 총격사망 중국인 유족에 배상”(6/17)

- 북한이 지난 4일 새벽 압록강에서 발생한 북한 경비대의 총격사건으로 사망한 중국인 유족들에게 1인당 3천달러씩을 배상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7일 보도했음.
- 중국신문주간은 이날 “북한 측이 이번 주초 단둥(丹東)시 정부를 방문,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유족들에게 1인당 3천 달러(한화 36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이 맺은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음. 북한 측은 또 총격 가해자들에게 대해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음.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북한 대표단이 최근 단둥을 방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희생자 1명당 3천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음. 중국 외교부도 이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음.
-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중국은 이 사건을 매우 중시해 사건 발생 후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면서 “양국 국경 지역 당국이 사후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그는 이어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 유관당국이 발표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음.
- 북한 경비대는 지난 4일 새벽 압록강에서 동(銅) 밀수를 위해 북한으로 접근하던 중국 배에 총격을 가해, 통역을 담당했던 조선족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음. 사고 직후인 지난 8일 친강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나섰으며 북한은 이를 만인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공식 사과하는 한편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

● “中대북투자 70%, 자원개발 집중”<평화재단포럼>(6/16)

-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중국의 대북 투자액 중 70% 정도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될 정도로 지하자원의 중국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음.
- 최 연구원은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북한 식량난과 대 중국 의존’ 주제의 포럼에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은 북한 지하자원 개발권을 독점 혹은 선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음. 최 연구원은 이어 “지금까지 파악된 25건의 북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20건을 중국이 차지했고, 확인된 12건의 투자 금액을 합치면 5천억원에 달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열악한 광산 개발 여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유리한 조건에 장기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원유를 전량 중국에서 들여왔고, 식량 수입 중 42.2%가 중국산이었다”면서 북한이 원유 등 전략 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도 우려를 표시했음.



- 그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남북 경협과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동시에 약화될 것이고, 이는 통일 경제 건설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천안함 문제를 매듭짓고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전환한 뒤 북한 지하자원에 중국과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음.
- 이어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의 지하자원이 낭비된다’며 광산 개발권을 중국에 넘기길 꺼렸으나 지금은 모든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남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과 경협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경제 운영이 불가능해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北-中 ‘총격사건’ 불구 일관된 경협행보(6/15)

- 북한 경비대의 ‘압록강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북한과 중국이 경제 협력 행보에서는 일관성을 이어가고 있음. 15일 중국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학성(李學成) 신의주시 책임서기를 비롯한 신의주 대표단이 지난 1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를 방문, 샤더런(夏德仁) 당서기 등 다롄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교류와 합작 확대 등 경협 방안을 논의했음. 또한 다롄의 주요 경제 시설 등도 시찰하였음.
- 신의주 대표단의 이번 다롄 방문은 지난 4일 압록강에서 북한 경비대가 중국의 밀수업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이 마찰을 빚은 직후 이뤄졌음. 압록강을 무대로 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밀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터라 북한 경비대가 중국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 이번 사건 발생 이틀만인 지난 6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사건을 공식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진상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역시 이례적인 조치로, 북·중간 모종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음.
- 그런 점에서 신의주 대표단의 이번 방중은 압록강 총격 사건이 양국간 경협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풀이됨. 신의주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7일 평안북도를 방문, 신의주 화장품 공장 등을 둘러보고 경협 방안을 협의한 왕민(王珉) 랴오닝성 서기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음.
- 다롄은 북한의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창리(創立) 본사가 있는 곳이자 지난달 초 방중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 방문지로 삼아 제3부두를 시찰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곳임. 당시 김 위원장의 다롄 제3부두 방문이, 다롄을 라진항 개발의 롤 모델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음. 랴오닝성과 신의주 대표단이 이번 상호 방문을 통해 논의한 구체적인 경협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북중간 상호 방문이 김 위원장 방중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 방중 당시 북·중 지도부가 합의한 경협 방안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일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는 평양에서 북한에 주재하는 14개 중국 기업의 투자기구 대표들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대북 무역과 투자 확대 등 북·중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주문했음.
- 또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13일 김광훈 북한 외무성 중국국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 방문단이 랴오닝성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푸신(阜新) 등을 시찰하고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 건설을 비롯한 북중 간 경협 방안을 논의했음. 이어 지난달 19일 배호철 북한 라진항장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를 방문, 장후취안(姜虎權) 훈춘시장과 만나 중국의 라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과 관련,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등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간 경협 행보가 잇따르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 총리 “21년전 北 간첩 석방 탄원 반성”(6/14)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21년전 북한 간첩의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음. 간 총리는 14일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지난 1989년 신광수(80)를 석방하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던 데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체포된 재일한국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서명했다. (신광수가 포함된 것은) 내 잘못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음. 자민당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의원이 “간 총리는 이전에 납치 사건으로 국제 수배된 신광수 전 북한 공작원 등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해 서명한 적이 있다”며 “총리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자 이렇게 답변했음.
- 간 총리는 신광수가 1985년 한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인 1989년 선배 의원의 권유로 신광수 등 한국인 정치범 29명의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음. 신광수는 1986년 사형 판결이 확정된 뒤 1988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9년 ‘밀레니엄 사면’으로 풀려나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송환 당시 북한으로 건너갔음. 이후 일본 경찰은 신광수가 일본인 납북에 관여했다며 국제수배했음.

마. 기 타

● 佛 르피가로 “北 권력 재점검 시간”(6/20)

-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가 18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을 ‘북한의 새로운 태양’으로 묘사하고 이런 신상명세서를 공개했음.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유럽의회가 대(對) 북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지난 2006년 6월 대북 인권 결의안 이후 4년 만임.

- 유럽의회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6월 정례 본회의의 마지막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음. 유럽의회는 이에 앞서 전날 오후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안 문안을 최종 조율했음. 결의안은 “북한 어뢰가 천안함 침몰을 야기했다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음. 유럽의회는 또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도 결의안에 명시했음.
- 유럽의회는 그러면서 북한의 우방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음.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이 실망스럽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음.
-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우회적 압박임. 결의안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적절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북한) 긴장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남북한 양측에 대해서도 “자제력을 발휘하고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도 명시했음.
-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EU 집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북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크리스티안 엘러(독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EU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결속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 한편, 유럽议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채택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됨.

● 애슈턴, 천안함 침몰관련 북한 거듭 규탄(6/17)

- 유럽연합(EU) 외교 수장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을 거듭 규탄했음.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는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계속된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



해 “한국 해군 함정 천안함 침몰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애슈턴 외교대표는 이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불온한 사건”이라고 비난한 뒤 “이에 대해 온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논의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 애슈턴 외교대표는 지난달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북한의) 이처럼 악질적이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對) 북한 강경 입장을 견지해 왔음. 그는 그러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북한과 EU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데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논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
- 유럽의회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북 결의안을 최종 조율, 17일 표결 처리할 예정임. 대북 결의안을 주도한 크리스티안 엘러(독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는 “최다 의석을 가진 국민당(EPP) 그룹과 2대 정치그룹인 사회·민주당(S&D) 그룹이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에 앞서 ‘인권보호 운동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정책과 관련한 토론 과정에서 영국 출신 보수 성향의 찰스 태너 의원은 북한을 미얀마, 베네수엘라와 함께 대표적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했음. 태너 의원은 “북한은 심각한 인권 침해국으로 특히 각지에 수용소를 두고 정치범 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유럽의회 외교관계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소속인 태너 의원은 이어 미얀마 군사정권과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을 거론, 북한과 미얀마, 베네수엘라를 당대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했음.

● 유럽의회, 北 규탄과 함께 中·러 압박할 듯(6/15)

-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대(對) 북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인 유럽의회가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임. 15일 연합뉴스가 사전에 입수한 6개 정치그룹의 개별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중도우파의 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S&D) 그룹이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조항도 담고 있음.
- 두 정치그룹의 결의안 초안은 2~3군데 단어를 달리 사용함으로써 표현 상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맥락은 거의 일치함. 유럽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의 토의를 통해 ‘절충된’ 단일 결의안을 마련한 뒤 17일 표결을 실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각 정치그룹이 마련한 개별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됨.



- 어떠한 경우든 EPP와 S&D가 연합하면 과반수 의석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두 정치그룹이 마련한 초안대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됨. EPP와 S&D의 결의안 초안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의 희생에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 정부 당국에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북한 어뢰로 인한 천안함 침몰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탄”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두 정치그룹의 결의안 초안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와 결론’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음.
- EPP와 S&D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한 사이의 ‘열린 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유럽지역 탈북자 단체 출범(6/15)

- 유럽 내 탈북자들을 대표하는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가 정식 출범했음.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는 15일 오후(현지 시간) 런던 한인타운 뉴몰든에 있는 뉴몰든 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음. 유럽지역에는 영국 350명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등에 모두 4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정착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연합회는 탈북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 북한 개혁·개방의 초석을 마련하고 북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립 목적을 내세우고 있음. 이들은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과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도 벌여나갈 방침임. 재영 조선인 협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김정일의 폭정이 끝장나는 그날까지 유럽 전체 탈북인들과 정의를 사랑하는 북한 인민들의 이름으로 북한 규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탈북자 대표들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 담당관 등이 참석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인, 6.25 미군희생 감사광고판 설치>(6/20)

- 재미한인이 한국전 60주년을 맞아 미군 파병을 통해 한국의 자유를 지켜준 미국에 감사하는 광고판을 애틀랜타 고속도로변에 설치해 화제가 되고 있음.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대형 청소용역업체인 GBM사를 운영 중인 박선근씨(미국명 서니 박). 박씨는 지난 16일부터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간고속도



로인 I-85의 애틀랜타시내에 한국전 당시 미국의 지원과 희생에 감사하는 광고판을 설치했음.

- 박씨가 1만달러를 들여 설치한 광고판에는 성조기와 미주 한인들 상징하는 햇불을 들고 있는 것을 쓴 남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감사의 글이 영문으로 적혀있음.
- 감사의 글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데 대해 한국인들은 감사하게 생각한다(Americans Died to Defend South Korean’s Freedom. South Koreans say…THANK YOU AMERICA! www.KAmericans.com)”고 적혀있음.
- 박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시절 6.25를 겪은 저로서는 이역만리 한국에까지 와서 고귀한 희생을 한 미군 등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그들의 희생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오는 7월20일까지 한 달여간 부착될 이 광고판은 양면으로 I-85 남과 북 방향 모두에서 볼 수 있고 전광판이라 밤에도 환하게 볼 수 있음.
- 박씨는 96년부터 한미 양국민 간 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애틀랜타 한미우호협회’를 창설하고, 민간단체 ‘좋은 이웃되기 운동’을 창설해 미국 주방위군이 고교중퇴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청소년 도전 프로그램’(Youth Challenge Program.YCP) 참가자들을 정기적으로 격려 방문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음.
-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미주 한인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하는 인터넷 뉴스매체인 ‘케이 아메리칸 포스트’(KAmerican Post)를 창간해 운영 중임. 이 매체는 웹사이트에 한국전 당시 미군이 치른 희생과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사를 모은 배너를 설치하고 있음. 광고를 본 미국인들 특히 재향군인들은 박씨나 매체 측에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음.
- ‘케이 아메리칸 포스트’는 현재 한국전 60주년을 맞아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이같은 광고판을 한인들이 최대로 거주하는 로스엔젤레스 지역에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한미, 이달 말 서해서 연합훈련 실시”(6/18)

- 한국과 미국은 이달 말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미가 연합훈련 일정을 협의한 결과 6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미국 7함대의 항공모함 등 항모전투단도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음. 한미는 오는 28일께부터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 저지와 대잠수함 탐지, 해상·공중 연합작전 능력등을 숙달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실전과 유사하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와 핵잠수함, 이지



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한국형 구축함(4천500t급.KDX-II)과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함.

-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첫 훈련은 서해에서 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음.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이 이달 말 실시됨에 따라 연합 대잠수함훈련은 7월 초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외교부 “한·미 ‘전작권’ 입장변화 없어”(6/17)

-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음.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유명환 외교장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만남에서 전작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계획을 이행·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미 “결정적 순간..한·미동맹 공고히”(6/17)

- 한·미 양국은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조치와 관련,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 이 자리에서 캠벨 차관보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한미동맹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성숙하게 전략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수차례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음. 캠벨 차관보는 또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왔지만 앞으로도 한치의 틈도 없이 공동노력을 계속 해나가자”며 “안보리 대응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캠벨 차관보는 이어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과 회동을 갖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에 관해 협의했음. 천 차관은 “한미동맹에 있어서 지금은 결정적인 시기”라며 “세계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익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캠벨 차관보는 “지금이야 결정적인 순간이며 한미동맹이 우리 앞의 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는 믿음을 공유하



고 있다”며 “천안함 사태와 같은 비극을 일으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절하고도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우리가 여러 분야에 걸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하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이용준 차관보와 오찬 회동, 한미동맹 및 이달 말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의 의제와 세부일정 등을 논의함.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일정을 마친 뒤 오후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남.

● 美외교협회 “전작권 전환 서두를 필요없어”(6/15)

- 미국외교협회(CFR)는 15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문제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내년에 비준동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제안했음. 미외교협회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4가지 옵션이 가능하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핵확산 야망을 멈추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 옵션을 마지막 가능한 수단으로 예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CFR은 이날 공개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한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이처럼 제시했음.
- CFR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존 킬러리 전 주한 미군사령관,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 등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2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8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정책보고서를 내놨음.
-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 “우리 태스크포스는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결정을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양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행의 핵심적인 기준은 시한이 아니라 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혀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신중한 일정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보고서는 “(계획된) 전작권 전환은 한국에서 대선의 해에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 쟁점화될 위험이 있는데다, (전작권 이행일인) 4월17일은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이 불과 이틀 지난 뒤여서 북한에 ‘미국이 우리의 팽창하는 힘을 알아보고 퇴각하는 것’이라는 선전에 전작권 문제를 이용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음.
- 한·미 FAT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당파적 정치환경과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감안할 때 미 의회에 이를 세일즈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미FTA에 걸려있는 이해관계와 이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에 2011년 의회 비준동의의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다만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일부 자동차 부문 조항과 관련



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과 관련한 분명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더딘 것이 부분적으로 작용해 아직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의 신중한 조사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박수를 보내며,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부과하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문제를 회부한 조치도 지지한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옵션과 관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정책이 없어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하는 것 ▲북한의 핵문제를 관리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일단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것 ▲북한으로 하여금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 ▲북한이 핵확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 등 4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복귀를 압박하는 방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핵개발 활동 혹은 확산활동을 추구할 경우에는 ‘정권 교체’도 하나의 옵션으로 예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과 파트너국가들이 취해온 노력은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면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던져주는 도전을 단순히 관리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음.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붕괴 등에 대비한 이른바 ‘비상 계획’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시스템 붕괴시 동시 개입한다는 합의를 이뤄내야 하며, 한·미 양자 논의구도에 일본을 조기 포함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한국, 미국, 중국 3개국 정상 간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음. 잭 프리처드 KEI소장 등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저자 3명은 15일 워싱턴D.C.의 미외교협회 건물에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임.

● <‘신축적’ 전작권 전환촉구 美보고서 잇따라>(6/15)

- 오는 2012년으로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음.
- 미국외교협회(CFR)가 내로라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5일 펴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보고서는 2012년 한국의 대선과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 등 한반도의 정치, 안보적 환경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음. 지난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뒤 나온 똑같은 취지의 주문임.

-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난해부터 줄곧 제기돼 왔지만, 미국 국방부는 “전작권 이행은 정상궤도를 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연기 가능성을 차단해 왔음. 일본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일본과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이면서 뜻하지 않은 ‘외교전쟁’을 치러야 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선에서 전작권이 정치쟁점화되지 못하도록 의지를 다져온 셈임.
- 이런 와중에 워싱턴D.C.의 싱크탱크들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임. 최근 미 상원 군사위가 전작권 연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검토해 12월까지 관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는 등 전작권 전환문제가 한·미 간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함.
- CFR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이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돼온 진전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런 평가는 전작권 전환이 이행되기 1년 전, 즉 2011년 4월 이전에는 적어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음.
- 보고서는 특히 “지금까지의 진전상황이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 양측의 능력에 회의감을 갖게 한다면 양국 정상은 새로운 일정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양국 정부에)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국 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의 제언은 지금까지 미국의 각종 싱크탱크들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함.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이뤄낼 수 있는 정치적으로 가장 적합한 시점을 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장 이상적인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종료 직후로 꼽았음.
- 보고서는 그러나 이 시점이 힘들 경우에는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비준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 비준동의를 데드라인을 내년으로 설정했음. 이번 보고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에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음.
-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까지 ‘전략적 인내’를 통해 북한을 회담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임. “단순히 상황을 관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라”고 촉구한 대목은 외교와 병행해 적절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이런 방안의 하나로 북한을 외부 세계와 노출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의 ‘환골탈태’를 유도해 내는 처방전을 보고서는 제시했음.
- 보고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외부세계 정보에 대한 북한 주



민들의 접근 확대 등이 실현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주장하는 ‘거짓말’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워싱턴D.C.의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되다시피 해온 북한의 정권교체를 하나의 가능한 옵션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음.

- 미국 행정부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던 방식과 유사한 ‘정권교체’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하는 것을 피해왔는데 이번에 CFR 보고서가 과감히 이같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임. 물론 보고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대화’와 ‘국제규범’을 다짐해 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정권교체’ 옵션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현실론을 인정했음.
- 그러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일부 저자들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압력을 공개적으로 가하는데 맞춰서 ‘정권교체’ 방안도 ‘조용하게(quietly)’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는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보여준 신중함과 미국과의 공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천안함 사건의 회부조치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 한미, 전작권 전환시 ‘리스크’ 분석 구체화(6/15)

-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리스크)를 식별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전작권 전환시 (안보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예정대로 2012년 4월17일 전환됐을 경우와 전환 시기를 연기했을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안보적으로 어떤 영향 요소가 발생하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실무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음.
- 그는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적용해 식별,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지난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오는 2012년 전작권을 전환기로 합의한 이후, 국방당국간 리스크 식별 작업이 구체화된 것은 올해가 처음임.
-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미국에서 (이양연기) 협의를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전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미국측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있다. 양 정상간의 확실한 대화 이전이라 실무선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음. 김 장관은 “조금씩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국은 실무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리스크를 식별한 다음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 전환시기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1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오는 12월1일 이전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상·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준비를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지 기술하며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작전통제 관계나 군사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주문했음.

나. 한·중 관계

● “중의 한국전 참전지연은 스탈린 탓”(6/18)

-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이 늦었던 것은 구 소련 지도자인 스탈린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 환구시보 영문판은 17일에도 김일성 남침 계획에 대한 스탈린의 승인, 중국의 참전배경 등에 대한 선즈화(沈志華) 화동사범대 교수의 인터뷰 첫 번째 분량을 게재한데 이어 18일에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초기 참전 개입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배경을 내용으로 한 인터뷰 두 번째 분량을 실었음. 선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즉각 개입한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측에 한반도 남부 항구와 거점을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 그런 가운데 “스탈린은 1950년 7월5일 중국에 ‘적군(한국군과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북·중 국경에 9개 사단을 배치한 것은 옳은 결정이며 소련은 공중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타이밍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은 (한국전쟁 개전후)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한반도 주요 해안과 항구의 경계경비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전했다지만 김일성은 소련의 승인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선 교수는 북한측에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던 1950년 8월28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보를 보내 ‘승리’를 확신시키며 다시 전투기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스탈린은 북한 측에 제때에 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중공군에 대한 공중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그는 그러면서 “1950년 9월15일 미군 등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전황이 북한에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같은 달 9월24일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스탈린은 오히려



김일성에게 북한 스스로 버티라는 주문을 했는가 하면 ‘한국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중국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다가 “며칠 후인 9월30일 스탈린은 자국의 주북한 대사로부터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으며 (미군 등의 인천상륙으로) 남하했던 인민군의 퇴로조차 차단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 김일성도 ‘직접적인 군사지원’ 또는 ‘중공군 등의 지원’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스탈린이 중국의 참전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 그는 “당시 스탈린이 한국전쟁에 조기에 중공군을 보내려는 마오쩌둥의 의도에 의혹을 가졌던 것 같다”면서 “중공군이 참전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소련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구 소련 붕괴이후 공개되는 비밀문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이라는 저서를 낸 바 있으며 중국 내에서 김일성의 남침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로 통함.

다. 한·일 관계

● 日 “재일한국인 신분증 휴대 2년안에 폐지”(6/20)

- 일본 측이 늦어도 2012년 7월까지 재일동포의 신분증 휴대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8일 도쿄에서 열린 제18차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외교부 아주국장 회의에서 일본 측이 이같이 밝혔다.
- 이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일본국과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이른바 ‘특별법’을 개정해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에게도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을 없앴음.
- 일본 측은 18일 회의에서 “법 개정 후 새로운 시행령을 만드는 데 필요한 3년 기한을 채워 2012년 7월까지 새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대표인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구했음.
-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재일동포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와 무(無)연금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아주국장회의는 1991년부터 매년 도쿄와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국장과 강영훈 일본과장 등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외무성, 경찰청, 법무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관계자가 참석했음.



● 법원 “일제징용임금 ‘1엔당 2천원’은 부당”(6/18)

- 일제에 징용된 피해자의 ‘미불 임금’(미수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법이 위헌 의심이 든다며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음. 정부는 2008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을 위로한다’며 이 법을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해왔기 때문에 징용 피해 회복에 새 국면이 열릴지 주목됨.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징용 피해자 김모 씨의 부인이 미수금을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 5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1엔당 2천원의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봤을 때 정신적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어 “설사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와 원화를 환산하는 등 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그간의 물가나 환율 상승에 비춰 매우 적은 금액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보상은 별개 법률로도 가능하고 협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김씨 부인의 사익(私益)보다 우월하다”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음.
- 김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중국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환했으며 1987년 세상을 떠났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회는 작년 6월 김씨가 일본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지원법에 따라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김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 27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음.
- 유족은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음. 법원 관계자는 “현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미수금 피해자가 물가 상승분 등이 제대로 반영된 현실성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미불임금은 징용된 조선인을 부린 일본 기업 등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일본 후생성이 해당 기업 등에게 이를 공탁소에 맡기도록 지시했음.
- 현재 일본은행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불임금 3억600만엔이 공탁돼 있는데 이는 당시 액면가라서 현재의 물가 가치로 3~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양정규, 日 정부로부터 훈장 수여(6/17)

- 양정규 현정회장은 한일 양국의 우호친선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인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을 수여한다고 현정



회가 17일 밝혔음. 양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으로 재임하며 테라우치 문고의 국내 반환,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시 금융지원을 위한 막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다고 헌정회가 설명했다. 훈장 수여식은 오는 21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열림.

● 日외상 “한반도 유사시 적절·신속 대응”(6/16)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출동과 관련 미국과의 사전협약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전했다. 오카다 외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정부가 주일 미군의 출동과 관련해 일본에 사전협약을 요청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과거 자민당 정권과 미국의 핵 밀약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출동과 관련, 미국이 사전협약을 요청할 경우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는 1969년 미국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사전협약이 있을 경우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태도를 결정한다”고 합의했으나 지난 3월 협의에서 양국은 ‘전향적으로’를 ‘적절하게’로 수정해 일본의 판단의 독자성을 높이는 표현으로 바꿨음.
- 양국은 지난 3월 협의에서 지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때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출동과 관련 사전협약을 면제하기로 한 ‘밀약’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효력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음.

●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개최(6/15)

- 한국과 일본은 16일 서울에서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를 열어 두 나라간 경제·통상 관계 전반을 협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회의에서 양국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부품소재 산업협력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력, 산업기술 R&D(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하고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표준협력 공동성명 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한국측에선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일본측에서는 스즈키 요이치 외무성 경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라. 미·중 관계

● G20 앞두고 미·중 환율 갈등 심화(6/19)

- 오는 23~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환율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보낸 16일자 서한에서 중국에 우회



적으로 시장 환율 시스템을 채택하라고 촉구했음.

- 18일 공개된 이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강하고 균형잡힌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환율이 필수적”이라며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세계경제의 활력에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은 중국이 시장 환율 시스템을 이행하면 세계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위안화를 재평가하라는 압박을 강화했음. 빌 버튼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하이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는 확실히 우리가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며 G20 이후 환율 보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은 이날 자국 환율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문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게 아니다”고 밝혔음. 이 자리에서 인민은행의 장타오(張濤) 국제국장도 “위안화는 G20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중국 페이스에 맞게 위안화 환율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중·러 관계

● <中 눈치보는 러, 달라이라마 방문 불허>(6/16)

- 러시아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자국 방문을 허용키로 했다는 외교관리의 발언을 반복해 과도한 중국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16일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리들은 전날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 달라이 라마의 러시아 방문을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특히 러시아 관리들은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달라이 라마의 모스크바 방문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음. 이는 최근 달라이 라마의 러시아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는 알렉산더 카다킨 주인도 대사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해명임.
- 카다킨 대사는 최근 달라이 라마가 망명중인 히마찰 프라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의 러시아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다킨 대사의 발언 이런 발언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러시아측의 반응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훼손을 우려한 과도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음.
- 한편, 달라이 라마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마지막 방문은 지난 2004년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불교도 집단 거주지 방문이었음.



바. 기타

● 한국·인도, 민간 핵협정 문제 논의(6/16)

- 한국과 인도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6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서 민간 핵협력 문제를 논의함. 가우탐 밤바왈레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외교장관 공동위에서 양국간 민간 핵협력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양국이 합의했던 민간 원자력 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짐.
- 이와 관련, 현지 외교 소식통은 “한국기업의 인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양국간 원자력 협정이 우선 체결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동위에서는 협상 진행을 위한 사전 조율 수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비시누 프라카시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IANS 통신에 “이번 회담에서 일종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현재 17기의 원자로(설비용량 4천120MW)를 가동 중이고 6기(3천160MW)를 건설하고 있으며 추가로 6만3천MW급 원전 건설을 추진중임. 따라서 양국간 어서 한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이 밖에도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정치·안보, 경제·통상, 문화, 영사 등 분야별 협력사업의 이행상황이 협의되고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임.
- 한·인도 외교장관공동위는 양국 외교장관 공동 주재하에 양측 관계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의체로, 2002년 4월 첫 회의 이래 지금까지 5차례 열렸으며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열리게 됨.

● 굴 터키대통령 “안보리서 한국과 함께 움직일 것”(6/15)

- 압둘라 굴 터키 대통령은 15일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와 관련,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사건으로 46명의 한국 장병이 희생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굴 대통령은 이어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항상 한국과 협력할 수 있게끔 한국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 굴 대통령은 또 올 11월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G20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개발경험을 전달하는데 있다”며 “동맹국이면서 충분한 개발경험을 가진 한국과 같이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굴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한국과 터키는 탄탄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손해보지 않게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G20 정상회



의에서 새로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함께 움직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굴 대통령은 “한국과 터키는 FTA 협정을 2010년말까지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터키는 EU의 경제·관세동맹 회원국인 만큼 (한국과) EU가 함께 진행하는 FTA에 터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굴 대통령은 양국간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력과 관련, “터키도 한국과 똑같이 기름과 가스를 외부에 의존하는 나라”라며 “양국은 이미 그전부터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했고 오늘은 에너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소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굴 대통령은 북핵 및 이란 핵문제에 언급, “터키는 핵무기를 반대하며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폐기문제는 전쟁이나 투쟁이 아닌 외교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굴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대(對)이란 제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 “터키는 이란 내의 우라늄을 제3국으로 옮기는 내용의 테헤란 협정이 잘 지켜지고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놓기 위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며 “터키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굴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는 이미 충분한 핵무기가 있는 만큼 추가로 새로운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며 “모든 나라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칙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1] <인터뷰>엘러,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연합뉴스, 6/17)

(스트라스부르=연합뉴스) 김영목 특파원 =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개인적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크리스티안 엘러(독일)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는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대(對) 북한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기자와 만나 이처럼 밝혔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엘러 대표는 “방한 때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직접 봤다. 어떠한 의심도 갖지 못했다”라면서도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나름 ‘건전한’(healthy) 토론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관계대표단은 매년 5월 말~6월 초 휴회기간에 정례적으로 남북한을 순차 방문했으나 올해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평양 방문이 북한에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이 때문에 북한 측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엘러 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반도관계대표단 대표 자격으로는 첫 방한이었는데. 방한 성과를 말해달라.

▲두 가지를 느꼈다. 우선, 천안함 사건을 다루는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차분하게 대응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만일 이탈리아 군함이 리비아 앞바다에서 격침됐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을지 상상해봤다. 다음으로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물론이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유럽의회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다. 2006년 6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4년 만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중요한 파트너다. 결의안 채택은 EU의 중요한 파트너와의 연대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유럽의회에는 노선을 달리하는 여러 정파가 있는데 이번 결의안을 작성하고 채택하는 데 논쟁은 거의 없었다.

-- 결의안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

▲결의안의 메시지는 매우 명료하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자행한 북한을 규탄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협력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을 위한 기존의 인도주의 구호 프로그램은 지속하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주문한 게 결의안의 메시지다.

- 결의안에서 합조단의 조사 결과와 유엔 안보리 회부를 지지했다. 한국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방한 기간에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직접 봤다.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나로선 어떠한 의심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건전한’(healthy) 토론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정부는 ‘선(先) 천안함 해결-후(後) 6자회담’ 입장을 견지하는 데 결의안에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닌가.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유엔 안보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안보리에서 결의안이든 의장성명이든 만족할 수준의 처분이 있으면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 추구는 절대 명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채택된 결의안에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한국 정부의 천안함-6자회담 연계 입장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유엔 안보리에서 만족할 수준의 처분이 있으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는 의미다. 천안함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양자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이 지역의 긴장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면서도 이란 제재안에는 찬성하지 않았는가. 이란의 핵무장이 중동지역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 안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